

TV토론회, 막판 변수 부상... '의혹·해명·책임' 공방 줄이어

이재명-원희룡, 'GTX 추진' 설전
무분별 공세... 사실확인 도마위

강경숙, '노란봉투법' 해석 논란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의 TV토론회가 연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이나 당의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는 후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TV토론회 중 가장 관심이 쏠린 곳은 직전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직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출연해 지난 2일 방송된 인천 계양을 TV토론회였다.

토론회 도중, 이 후보가 지역구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자 원 후보는 어떤 기관과 협의를 하고 추진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천 계양갑 현역 의원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부 관계



지난 1일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계양을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 힘 후보가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자와 만나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다시 말했으나, 직전 국토부 장관인 원 후보는 "사실 확인 다 책임질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허위사실공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이 운영하는 포털 블로그에는 지난해 6월 7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동수·이재명

의원, 김현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어명소 당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함께 유동수 의원실에서 만나 '인천 지역 현안인 GTX-D Y자 노선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 간담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전북KBS에서 방송한 비례대표후보자 토론회에선 '노회찬의 길'을

걸겠다고 주장한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비례대표 후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73조 개정안)이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구제법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해명을 부탁한다"고 질문해 노동계의 격한 반발을 불렀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친노회찬인사로 분류되는 신장식 변호사를 당에 영입하면서 '노회찬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진보·노동 정치의 상징인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끌어오면서, '노회찬 정신'과 정반대되는 질문을 한 것.

나순자 후보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을 대표해 나온 후보의 질문 내

용이 노동탄압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발언과 똑같다"면서 "노동3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윤석열 정권과 닮아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전국급속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조국혁신당의 노동관이 무엇인지, 노동에 대한 당의 입장과 태도가 무엇인지 책임지는 자세로 밝혀라"며 "조국혁신당의 후보자들이 즐겨 입는 정장의 옷자락으로 노동의 고민과 아픔을 덮으려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아예 발언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해당 질문을 한 강경숙 후보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녹색정의당 나순자 후보에게 정의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한 것"이라며 "보수 쪽의 논리가 이런데 뭐라고 논박하면 좋을까요" 이런 취지의 우호적 발언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정치권, 사전투표 독려... "주권 행사해주시길"

윤 대통령·여야 지도부 한목소리

민주당 "국민 거역 정치세력 대항"
국민의힘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창"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양일간 실시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4일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254명 모든 후보들이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투표할 것"이라며 "사전투표 하면 진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다'는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만 생각하고 모두 투표해달라

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누가 이기겠느냐"며 "1일간 싸우는 사람이 싸움 동안 싸우는 사람 이길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10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투표 자체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여당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는데 진짜 그런 거냐, '내가 한 표 찍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며 "남들 이야기에 불안해하며 투표장 가지 않거나 명백한 범죄 혐의자들, 잘못하고도 누우치지 않고 사퇴도 안하는 철면피 후보를 찍으면 그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저도 내일 투표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주는 한 표가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창이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 개혁적이고 더 혁신적으로 바뀌는 원동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부산을 찾아 "왜

곡되지 않은 정치적 의사가 표명될 수 있다면 정치권력은 국민을 거역할 수 없다"며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헌법 1조 1항에 쓰여있지만 정치권력은 언제나 소수의 기득권을 편들고 있다"며 "주권자의 상당수가 주권을 포기했고, 그 포기한 주권만큼을 누군가가 가로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4월 10일 선거가 정치인 간의 승부처럼 보이지만 (승자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기는 것은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이겨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입증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고생하지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길은 정치가 더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변을 독려해야 한다. 남은 시간 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투표가 곧 내 인생이라는 것을 함께 외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익·김현정·안순진기자 pathfinder@

국민통합위원회, 청년주거 대책 제안

"폐교부지, 대학 기숙사 건립 활용 中企 전세 보증금·대출 1억 상향"

4개 분야 12개 주요 정책 소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 도심 내 폐교부지의 기숙사 건립 활용 등 청년주거대책을 제안했다.

김영덕 특위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를 위한 4개 분야 12개 주요 정책을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특위가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 생애주기 주거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안을 논의하면서 도출됐다.

청년 주거 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 및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위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준비 TF와 11차례의 정례회의(주 1회),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대학생 주거 안정 강화 ▲취업준비생 등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일하는 청년 주거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대학생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폐교 부지를 기숙사 건립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관련법 정비와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 확대, 사립대학에서 기숙사 직접 건립 시 용자 혜택 강화를 제안했다.

취업 준비생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청년 주거 분야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정기 실시, 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청년주거대책을 제안했다. 김영덕 특위 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 건립 시 정책자금 용자를 허용하는 방안과 민간의 '특화형 공공임대' 제도를 활용해 맞춤형 공간이 마련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주거시설 공급 확대도 제시했다.

끝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가 보다 좋은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새가족 주택' 시범공급을 제안했다. 새가족 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임대주택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 주택단지' 조성 및 결혼·출산에 따라 청년이 선택가능한 임대주택 범위 확대도 제안했다.

/박정익 기자

소상공인 지원 강화... 2.3조 규모 이자환급·대환대출 공급

>> 1면 '신생아 특례대출...'서 계속

소상공인 지원 강화 차원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 시행을 주요 과제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의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 방안'으로 "약 17만명이 1인당 153만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기업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공매도 금지

및 부작용 해소 위한 제도개선 ▲농식품·과일 할당관세 규정 개정 ▲부담금 제도 전면 정비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전국권 'x-TX' 추진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취업 허용 등을 소개했다.

/박정익 기자